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실업률을 높여
실질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이다

3면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심화로
세계화는 후퇴하는가?

7~10면

세계화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했는가

14~15면

노동자 투쟁

하이트진로 화물 파업 12면
화물연대 파업 평가 16,13면
철도 민영화 반대 2면

화성외국보호소에서

단식 투쟁 중인
이주민들 인터뷰 13면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에 일조하는 것

관련 기사 4면



윤석열 정부가 철도 민영화 계획을 꺼내다

윤석열 정부가 5월 초 발표한 국정과제 보고서는 철도 민영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철도 관제 업무와 시설유지 업무를 공기업인 코레일(열차 운영 책임)에서 떼어내 국가철도공단(옛 철도 시설공단, 철도 건설 시설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이관하려 한다. 또, 차량 정비 업무에 민간 제작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철도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 국가철도공단으로 넘기면 민간 기업들이 철도 운송에 진출하기 쉬워진다. 이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의 수순이다.

철도는 열차의 운전과 정비, 선로를 비롯한 철도 시설의 건설과 유지·보수, 이들을 안전하게 연결해 줄 신호 등이 하나의 체계 속에 있어야 한다. 철도의 여러 기능은 쪼개면 쪼갠수록 사고 위험이 커지고 철도 노동자들과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또, 차량 정비에 민간 기업들이 진출해 수익성 논리가 강화되면 철도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 압력이 강화될 것이다.

민영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하나로, 정부의 소유 혹은 기능을 사적 자본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우회적 민영화이다. 한꺼번에 민간 기업에 팔면 국민의 반발이 심하고 자본의 부담도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각하거나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일부 보장하려는 것이다.

민영화는 수익성 제일주의로 서비스



안전 위협, 요금 인상, 노동자 구조조정 낳을 철도 민영화 2018년 강릉 KTX 탈선 사고

질 하락, 안전 위협,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위해 코레일과 SRT(SR이 운영하는 수서발 고속철도)를 분할시켰다. 물론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에 SRT의 민간 매각은 추진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분할 이후 정부는 수익성과 실적 위주의 경영 평가를 시행하며 코레일과 SR을 경쟁시키고 있다. SRT 운행이 시작되자 코레일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던 KTX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코레일의 적자가 커졌다. 코레일은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벽지 노선 축소를 거듭 시도했다. 2017~2021년 무궁화호는 36퍼센트나

줄어들었다. 그만큼 교통 취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이다. 윤석열의 철도 민영화 정책은 이런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자들이 가장 큰 명분으로 삼는 것은 비용 절감과 효율 증대다. 그러나 민영화의 효과를 평가한 국내외 연구에서 민영화로 생산성과 효율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얻은 경우는 거의 없다.

그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당장의 재정 절감 효과와 이데올로기적 필요 때문이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지배자들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아니라 공공부문이 경제 위기의 원인처

용어설명

철도 관제권

열차 운행 계획, 선로 배분, 열차의 제어와 관리, 비상시 응급조치 등 열차운행을 제어·통제·감시하는 일. 가령 하나의 선로 위에서 양방향 열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열차운행을 제어하거나,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선로 유지·보수 작업에 관해 통제하는 일.

럼 보이도록 하려 한다. 공공 투자를 줄이고,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며, 시장과 경쟁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퍼뜨리기 위해서다.

정부가 말하는 재정 지출 효율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논리는 정규직 감축과 외주화 확대, 노동강도 강화 등 노동조건 공격과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리이다. 이것은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악화로 이어져 왔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2018년 강릉 KTX 탈선 사고는 역대 정부들이 인력 확충과 안전 투자를 외면한 결과였다.

재정 적자가 철도 노동자들의 책임도 아니다. 정부는 높은 선로 사용료를 받고 있고, PSO(공익서비스 부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코레일의 적자는 싼 값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착한 적자”다.

철도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요구는 정당하다.

김은영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악안을 앞다퉈 발의하다

민주적 권리 후퇴 반대한다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개악안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에만 6개가 나왔다.

2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안으로, 시위 금지 장소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4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이다. 우선,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시위 금지 장소 조항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한다.

여·야 모두 자기 정당 소속의 전·현직 대통령을 보호하겠다고며 집시

법을 개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개악되면 단지 우파나 극성 문재인 지지자들만 제약하지 않는다. 지배자들에게 진정한 위협인 좌파·노동운동과 피억압 대중의 항의가 제약되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최근 화물연대 파업 국면에서 공공운수노조가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를 신고하자, 경찰은 법적 근거도 없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앞서 말한 개악안들은 이런 억압적 조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최근 경찰

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가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문제를 여·야 대결로만 보지 말고, 피억압·노동계급의 민주적 권리 침해로 보며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혐오 표현

문제는 전·현직 대통령 주변 시위 금지만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안에는 혐오 표현 금지를 이유로 집회·시위 권리를 전반적으로 제약하는 개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는 집시법의 소음 규제나 최

대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모호한 규정을 내세우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그것을 판단하고 처벌할 국가의 통제를 강화한다. 그리고 그 통제의 칼날은 지배자들에 맞서 저항하는 좌파적 운동과 관련 세력들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

가령 윤영찬 안이 규정하는 혐오 표현은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 행위”이다. ‘불편한 용기’ 시위에서 젊은 여성들이 외친, 적나라하지만 정당한 정서의 구호, 세월호 유가족이나 해고

▶ 3면으로 이어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실업률을 높여 실질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극심한 불안정성이 특징인 세계에 살고 있다. 현재 주요 자본주의 경제들의 관리자들은 대개 그 나물에 그 밥인 인물들이지만, 상황에 떠밀려 자신의 정책을 180도 바꿔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그 가장 최근 사례는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혼란이다.

지난여름 이래 급등해 온 물가 상승률은 그 자체로 불안정 심화의 징후다. 지난 10년 넘게 경제 대국들의 물가 상승률은 0퍼센트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제 그 수치는 두 자릿수로 치솟아, 40년 만에 가장 높다.

인플레이션 심화는 세계 경제가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겪은 최대 불황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의 반영이다. 이 불황을 초래한 것은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최초로 정점을 찍은 일이었다. 공급망 교란 와중에 상품·서비스 수요가 늘어났고, 노동자들이 이직을 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했고, 천연가스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심화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을 더 끌어올렸다.

중국은 예외다. 실제로 5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퍼센트 하락했다. 중국 경제는 상하이·베이징 같은 도시에 시행된 봉쇄 조치 때문에 침체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수출 시장의 호황을 겨냥해 기업들에 투자와 생산을 독려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기에 주요 경제들을 관리했던 각국 중앙은행은 패닉에 빠져 있다. 이들은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래로 금리를 매우 낮게 유지하고 금융 시스템에 돈을 쏟아부었다. 이제 이런 정책은 180도 바뀌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임금-물가 상승의 악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생계 위기

순환”을 우려한다. 이윤을 늘리기 위해 물가를 급등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허다한데도 그들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해 실질임금을 지키려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망공을 퍼붓는다. 그런데 이는 사실 경제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철거용 망치”

공격의 핵심 수단은 금리 인상이다. 금리 인상은 지난 2월 영국 중앙은행이 시작했으나, 이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선두에 서 있다. 지난주에 연준은 금리를 0.75퍼센트 포인트 인상했다. 보통 금리를 변경할 때는 이보다 훨씬 적은 0.25퍼센트포인트 단위로 한다. 연준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원했던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평일 뉴스레터 ‘언헤지드’의 한 칼럼은 이렇게 설명했다. 연준의 정책으로 “신용 거래 비용이 커져서, 기업 투자와 소비자 지출이 모

두 줄어든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자산 시장의 유동성도 떨어져, 기업과 가계는 더 가난해지고 소비 성향도 줄어든다. 고용이 줄어들고 해고는 늘어난다. 연준의 정책은 이런 변화를 무차별적으로 일으킨다. 이는 수술용 메스가 아니라 철거용 망치다. 박살을 내 버리는 것이다.”

영국 중앙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도 금리를 인상했고, 유럽중앙은행도 7월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어쩌면 한 번에 1퍼센트포인트나 인상할 수도 있다.

연준은 양적완화 정책을 끝내려고도 계획 중이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국채와 기업채를 사들여 금융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자금을 투입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연준의 “양적 긴축”은 팬데믹이 오기도 전인 2019~2020년에 그랬듯, 자금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파월은 이런 정책으로 경기 침체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물가 상승을 빠르게 끌어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월이 말하는 “연착륙”이 가능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더는 없는 듯하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휘두르는 “망치”는 실업률을 높일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임금의 대폭 삭감을 강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다.

비슷한 일이 1979년 10월에도 있었다. 당시 신임 연준 의장 폴 볼커는 혹독한 통화 긴축을 감행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었다. 그로 인한 미국의 경기 침체는 제3세계 부채 위기를 촉발시킨 달러 강세를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됐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당시 “볼커 쇼크”와 같은 일이 이번에도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내 생각에 중앙은행은 결국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후퇴할 듯하다. 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자 파업이 저들을 물러서게 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위크〉 2810호 / 번역 최병현

▶ 2면에서 이어짐

노동자가 연설하다가 울분에 차서 뺨은 욱설 등 수많은 사례들이 여기에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이 혐오 표현을 집시법 개악의 명분으로 앞세우는 이유는 이 문제가 정의당, 페미니즘 운동 등 좌파 다수의 약점이기 때문이다. 좌파 내에는 극우 세력, 혐오 표현과 차별적 언행을 국가의 처벌·규제 강화로 억제하자는 입장이 득세해 왔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2016~2017년 미국 트럼프의 집권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혐오 표현, 가짜뉴스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서방 각국 정부들은 그것을 이유로 집회·시위 권리를 제약하고 온라인 표현물이나 언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갑자기 차별 문제나 민주주의에 진정으로 관심이 생겨

서 그러는 게 아니다. 정치·경제적 다중의 위기 속에서 사회 불안정이 심화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의 억압적 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필요는 한국 지배자들에게도 다르지 않다.

기본소득당 용혜인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주류 여야의 시위 장소 금지 시도에 맞서 장소 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내놨다. 옳은 일이다.

그런데 혐오 표현을 이유로 한 민주

적 권리 제약 시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좌파적 견지에서 비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집시법 개악에 대해 근본에서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기층의 반발과 항의가 커지지 않으면 국회 통과 자체는 장애물이 없다.

민주적 권리 공격 시도에 맞서 경보를 울려야 할 때다.

김승주

(6월 29~30일)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에 일조하는 행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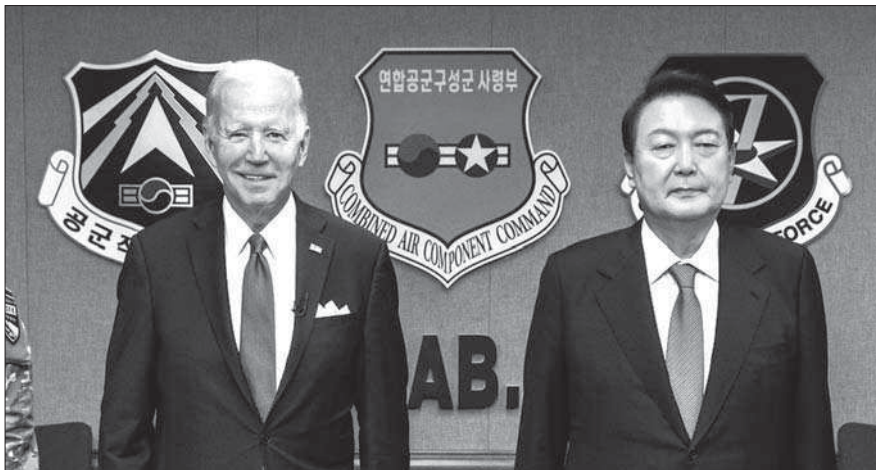
김준호

우크라이나에서 유혈 난자한 소모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6월 29~30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돌을 더 키울 방침이 결정될 것이다.

이는 6월 15~16일에 정상회의 사전 회의 성격으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회의를 주재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노르웨이 노동당 소속 정치인)는 “나토 동맹이 우크라이나에 절실히 필요한 중화기와 장거리 무기 체계 등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는 “나토가 전투 대형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나토는 동부 전선에서 공중·해상·사이버 방위 태세를 확충하고 무기·장비 재고를 보충해, 이 지역에 배치된 전투단을 더 강화할 것이다. 또, 더 강력하고 전투 태세가 더 잘 갖춰진 새로운 힘 투사 모델을 추가 배치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환점”이라며 “우리 모두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요청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중화기 지원 요청을 말한다.



한국 지배자들은 미국의 대외 전략에 하위 파트너로 동참해 한국 자본주의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 한다

미국뿐 아니라 서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도 여기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6월 16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뉼엘 마크롱, 독일 사민당 총리 올라프 솔츠, 이탈리아 총리 마리오 드라기가 함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키이우)를 방문해 중화기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6월 17일에는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도 키예프를 방문해 중화기를 추가 지원하고 우크라이나군에 대규모 군사 훈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 후보국 자격 부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을 설계한 전략가 즈비

그뉴 브레진스키(1928~2017)가 《거대한 체스판》에서 지적한 대로, “유럽연합 가입 절차를 시작했거나 가입 협상에 초청된 국가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나토의 보호를 받는다고 간주할 수 있다.”

확전 위험 더욱 증대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우크라이나를 서방 동맹으로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벌어졌음을 떠올리면, 이것은 확전 위험을 더욱 키우는 일이다.

이번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때 가입 여부가 결정될 핀란드·스웨덴의 방위 태세 및 대(對)러시아 억지력

강화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핀란드-러시아 국경 지대가 나토에 의해 군사화되면, 러시아가 나토군과 직접 대치하는 경계의 길이가 갑절이 된다. 러시아의 반발이 뻥히 예상되는 일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곳곳을 초토화하는 유혈난자한 소모전을 더 밀어붙이는 식으로 반발할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나토는 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할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이 지원한 하푼 미사일로 흑해의 러시아 군함 두 척을 격침했다고 밝혔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의 미사일로 러시아 군함을 공격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토의 무기 지원이 추가될수록 이런 공격이 더 늘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6월 10일 신임 대통령 윤석열이, 15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참가는 나토의 전쟁 개입이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치적 효과를 낸다.

이것은 나토의 확전에 일조하는 것이자, 전쟁으로 인한 물가 폭등으로 노동계급의 고통을 증대시키는 행위다. 따라서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규탄해야 마땅하다.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 대응을 새 전략에 포함할 것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새 ‘전략 개념’도 결정될 것이다.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은 이로써 나토 동맹이 “규칙 기반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일본 등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핵심 목적이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로 “유럽 동맹국들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블링컨해, 자신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군사 동맹 나토의 힘을 중국 압박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서유럽 강대국들도 여기에 동참할 이해관계가 있다. 그들은 중국의 광활한 시장에서 득을 보고 싶어 하지만,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으로 중부·동부 유럽 국가들에 투자·차관을 늘리는 것은 언짢아한다. 이 지역에서 자기 영향력이 약화될까 봐 우려해서다.

현재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인 첨

단기술 부문 문제도 있다. 서유럽 강대국들은 5G 등 첨단기술 인프라를 중국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을 안보 위협으로 여겨 왔고, 자기네가 개발한 기술이 해외직접투자(FDI)를 매개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불편해 한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행보에 동조하는 것이다.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공조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2010년 즈음에 중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일은 일본 지배자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

일본은 미국과 협력해 자국의 제국주의적 위상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일본이 쿼드에 동참하고 군비를 증강하는 이유다.

일본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아시아 4개국(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 간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4개국 회담이라는 형식은 껍질러운 한·일 관계도 고려한 것일 듯하다.)

미국의 대외 전략에 동참해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도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런 행보는 한국 지배자들에게 상당한 고민거리를 안겨 주기도 한다.(관련 기사 본지 419호 ‘윤석열의 친미 행보와 그 모순’)

반발

6월 15일 시진핑은 푸틴과 통화했다.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이 통화에서 시진핑과 푸틴이 “나토가 아시아에 진출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양국이 전략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토의 전방위적 압박에 공동 저항할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

다. 두 정상이 직접 통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다음 날인 2월 25일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중국 압박 강화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효과가 난 것이다. 중국은 6월 23일 열릴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역시 나토 확장에 맞서는 장으로 활용하려 한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중국·러시아·인도 간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미국이 매우 경계하는 일이다.

중국의 이런 시도에 대응해 미국은 또다시 중국 압박을 키울 것이다. 제국주의(간) 갈등이 더 첨예해지는 악순환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 본지 웹사이트에서 [카드뉴스] 나토의 실체, 1분 만에 파악하기도 보세요.



일본, 방위비 지출을 미·중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린다

제국주의 각축전이 더욱 격화되는 아시아

일본 정부의 군비 증강 속도가 심상찮다.

첫째, 파격적인 수준의 방위비 증액이 결정됐다.

6월 8일 일본 정부가 각의(한국의 국무회의격)에서 통과시킨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에 따르면, 일본은 5년 내 방위비를 현재의 2배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약 5조 4000억 엔인 방위비를 2027년에는 10조 엔(약 100조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퍼센트 수준으로 유지해 온 그간의 기조를 깨트리는 것이다.

방위비 1퍼센트 제한 기조는 1987년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일본의 군국화를 우려하는 국내외 시선을 고려해 실제로는 유지돼 왔다. 그런데 지난해 1퍼센트선이 처음으로 깨지더니 금세 2퍼센트대까지 증액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일본은 세계 방위비 지출 9위에서, 미국과 중국을 뒤잇는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주요 국가들의 군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번 방위비 증액 결정은 세계적인 군비 지출 경쟁을 더한층 격화시킬 것이다. (관련 기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격해진 군비 경쟁', 411호, 김영익)

평화헌법 무력화

둘째, 일본 정부는 올해 개정될 예정인 국가안보전략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반격 능력'으로 이름만 바꿔서 명시할 계획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적국의 군사거점을 선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해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조해 200킬로미터인 사거리를 1000킬로미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상하이는 물론 중국 동부의 해안 지역까지 타격 가능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

이 결정은 평화헌법(헌법 9조) 개정 추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조항에 따르면 일본은 공격을 위한 군대와 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적 기지 선제 공격은

군비 지출 순위

2021년		방위비 증액 시	
1위	미국	1위	미국
2위	중국	2위	중국
3위	인도	3위	일본
...			
9위	일본		
10위	한국		

일본 방위비 증가 추이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1956년 처음 제기된 이래 65년 넘게 지속된 논란거리였다.

평화헌법 개정을 1순위 안보 과제로 삼았던 아베는 2018년 '방어 능력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들을 도입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데 '사실상' 성공한 바 있었다. 그로부터 이번에 기시다 내각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정책적으로 명시하는 수준까지 오는 데는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미국·일본 vs 중국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강력한 지지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5월 23일 일본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기시다 총리한테 방위비 증액,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등 군사력 강화 구상을 들은 뒤에 이렇게 말했다.

“일본이 방위 능력을 높이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더 강한 일본, 더 강한 미·일 동맹은 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좋은 것을 가져다준다. 그것이 대만해협에서도 지속되고, 남·동중국해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대만해협 긴장과 남·동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은 화약고나 다름없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만 큼이나 위험한 뇌관들이다.

미국은 중국과 경쟁 관계인 중국 주변국들을 동맹으로 포섭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일본, 인도, 호주를 주축으로 그 하위에 한국 등 중간 강국들을 묶어 두는 것이다.

특히 현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동맹 강화를 전임 트럼프 정부보다 더욱 중시하고 있다.

5월 말 일본 방문에서 바이든은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안보

협의체) 대면 회의와, 경제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식을 열었다.

또,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국·일본·호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은 중국을 함께 견제하기로 뜻을 모으고, 3국 공동 군사 활동 중에 미국과 호주의 군함이 공격받으면 일본 자위대가 출동해 방어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처럼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제국주의적 진출 심화는 격화하는 미·중 갈등과 깊이 맞물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매우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난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측에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군비 증강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대중의 불안과 불만을 더 많이 자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모순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 여론이나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친제국주의 노선 속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 하는 이상,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누적될 것이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만이 한국 정부와 각국 지배자들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하도록 고무해야 한다.

김승주



5월 23일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회담하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일본 총리 기시다

6월 19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

신자유주의자 마크롱, 과반 확보 실패

좌파연합 뉘프와 파시스트 둘 다 지지 상승

찰리 김버

6월 19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큰 타격을 입었다. 마크롱 세력의 의석은 과반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반을 확보하려면 289석이 필요한데, 마크롱은 245석밖에 얻지 못했다.

5년 전인 2017년 마크롱의 정당이 포함된 선거 연합이 356석을 차지했다. 이번에 의석이 준 것은 마크롱이 팬데믹 대응에 실패한 것, 부자를 위해 통치한 것, '노란 조끼' 운동을 강경하게 공격한 것, 생활비 위기에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마크롱의 최측근 의원 두 명이 낙선했다.

장뤼크 멜랑송이 이끄는 선거 연합 신(新)생태사회민중연합(NUPES, 이하 "뉘프")은 131석을 얻어 제1 야당이 됐다. 일부 사람들이 기대한 것보다는 적지만, 그럼에도 전진했다. 하셀 케케의 당선이 눈에 띈다. 케케는 호텔 청소 노동자이고 파리 북서부 바티볼 지구 소재 이비스 호텔에서 파업을 주도했다.

케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아말로 빈민가에 살면서 핵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욕에 시달리며 착취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케케는 파리 외곽 지역의 선거구에서 마크롱 정부 체육부 장관 출신인 룩사나 마라시노비를 꺾고 당선됐다.

뉘프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생필품 가격을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마크롱이 폐지한 부유세 재도입도 약속했다. 뉘프의 선거 승리는 좌파적 대안에 대한 열의를 보여 주는 매우 반가운 신호다.

파시즘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파시스트 마린 르펜의 정당 국민연합(RN)도 89석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 최다 기록이었던 35석을 넘는 것이다. 35석 획득은 마린 르펜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이 당을 이끌던 1980년대의 일인데, 당시에는 선거제도상 비례 의석이 훨씬 많았다.

파시스트들에 맞서 공동전선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



큰 타격을 입은 마크롱은 의회에서 파시스트들과도 손잡을 수 있다

다. 뉘프의 선거 성적이 좋다고 이 과제를 미루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파시스트들의 의석 수가 늘어나고 있다. 1997년 1석, 2002년 0석, 2007년 0석, 2012년 2석, 2017년 8석, 2022년 89석. 국민연합은 주류 정당들에 투표해 왔던 많은 유권자들에게 초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정당들의 인종차별 덕분에 정상적인 당이 돼 정상적인 정치 스펙트럼의 일부처럼 보인다.

이 모든 선거 결과는 투표율이 46퍼센트였다는 점에 비춰 봐야 한다. 유권자 절반 이상이 체제에 대한 환멸이 너무 큰 나머지 세간의 이목을 끈 총선에서조차 아예 투표하지 않았다.

마크롱은 의회에서 과반당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우파와의 동맹에 기댈 것이다. 전통적 보수 정당 공화당(64석을 얻은)도 그런 동맹의 대상이겠지만, 마크롱은 몇몇 표결에서 심지어 르펜의 파시스트 정당과도 손잡을 수 있다.

결선 투표를 앞두고 마크롱은 뉘프가 위험하고 반민주적이라고 마녀사냥하려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크롱과 그 동맹들이 멜랑송 지지자들의 환심을 사려 애썼다. 마크롱과 그 동맹들은 4월 대선 결선 투표에서 르펜을 꺾기 위해 멜랑송 지지자들의 표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TV 뉴스 채널 '프랑스24'가

말하듯, "[대선 후] 지난 두 달 동안 여당은 경륜 있는 좌파 활동가[멜랑송]와 신생 선거 연합[뉘프]을 공화국이 직면한 새로운 위협이라고 지목했다. 마크롱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장미셸 블랑케르의 표현을 빌리면, 뉘프가 '르펜의 극우와 꼭 마찬가지로 위험한' 극단주의 세력이라는 것이다." 이런 필사적인 비방은 먹히지 않았다.

결선에서 뉘프와 국민연합이 직접 경선한 선거구에서, 1차 투표에서 마크롱 쪽에 투표한 유권자 중 72퍼센트가 기권했고 16퍼센트가 뉘프에, 12퍼센트가 국민연합에 투표했다. 1차 투표에서 보수파에 투표한 유권자 중 30퍼센트가 국민연합에, 12퍼센트가 뉘프에 투표했다.

5개 정당의 선거 연합 뉘프에는 멜랑송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프랑스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 등이 있다.

6월 12일 1차 투표에서 이들의 득표를 합치면 2017년에 얻은 표와 비슷했다. 하지만 선거 연합을 결성함으로써 이들은 돌파구를 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이들은 사회당 같은 친기업적 세력도 선거 연합에 끌어들이야 했다. 프랑스 녹색당도 급진적이지 않다.

뉘프를 유지하려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경찰 폭력 감시 위원회 설

치, 대기업의 정리해고 금지, 은행 국유화 같은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뉘프의 선거 승리는, 1차 투표와 결선 투표 사이 기간에 활력 있는 캠페인을 벌였던 좌파들에게 커다란 부양력을 줬다.

양극화

프랑스 정치는 양극화하고 있고, 더한층 격동기에 진입하고 있다. 핵심적 전투는 거리와 일터에서 벌어질 것이다. 현재 핵심 쟁점은 좌파에 투표한 사람들(과 기권한 사람들)을 사장들과 정부에 맞선 반격에 동원할 수 있을지 여부다. 마크롱의 연금 개악 시도가 초기 시험대가 될 것이다.

개표 결과가 대부분 나온 후에 멜랑송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밤 제 메시지는 역시 투쟁입니다. 지금 세상에 건너리가 가장 많이 난 젊은 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들에게는 훌륭한 투쟁 도구 뉘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임금·불평등·인종차별·파시즘에 맞서고 대중의 권리를 쟁취하는 전투는 의회 제도 바깥에서 벌어져야 한다. 선거적 책략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그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10호 / 번역 김준호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심화로 세계화는 후퇴하는가?

조셉 추나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마르크스주의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6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와 발제자의 토론 요약이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팀이 첨가한 것이다.

세계화는 세계 자본주의의 여러 부분들 사이에 경제적 연결이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세계화라는 개념은 신자본주의라는 또 다른 개념과 종종 결부됩니다.

애초에 신자본주의는 시장이 최선의 자원 배분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등장했습니다.

또, 신자본주의는 이런 이데올로기로 뒷받침되는 일련의 정책들이기도 합니다. 규제 완화, 민영화, 노동조합 약화 시도 등이 대표적이죠.

신자본주의라는 용어로든 세계화라는 용어로든 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 자본주의의 발전상을 온전히 포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래로 세계경제의 상호 연결성이 증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세계화의 위기' 담론은 자본주의의 실질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자본주의 시대에 세계적인 생산망은 더욱 복잡해졌고, 폭스콘 같은 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신자본주의와 세계화 — 레토릭과 현실

오늘날의 상황을 세계화 담론이 절정에 이르렀던 1990년대 초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소련·동구권 붕괴로 냉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또, 1991년 미국은 35개국을 이끌고 이라크에서 군사 작전을 벌였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유명한 책 《역사의 종말》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후쿠야마는 20세기의 거대한 이데올로기 쟁투는 이제 끝났고, 전 세계가 미국·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의 — 이에 더해 1995년에 창립된 세계무역기구(WTO)의 — 주도하에 단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자본주의가 세계 도처에서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세계화로 자유 시장의 혜택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고, 부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부가 낙수 효과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가는 시장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구실만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91년 이라크 침공 같은 군사적 개입은 이런 신자본주의 질서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을 단속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망은 어느 때고 많은 부분이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예컨대 신자본주의 시기 내내 국가는 경제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신자본주의적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실제로 국가의 재정 지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부는 낙수 효과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에게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지지자들은 세계화가 성공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금융시장·무역·생산망의 세계적 통합이 실제로 증대했다는 점에서는 말입니다.

1990년에는 국제 무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8퍼센트를 차지했

습니다. 2008년에는 그 수치가 61퍼센트였습니다.

중국 같은 자본 축적의 새로운 중심지들이 생겨나고, 그와 함께 전 세계 노동계급의 규모가 훨씬 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스마트폰·컴퓨터 등 소비재 제품을 만드는 복잡한 세계적 생산망의 일부가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류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은 중요한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 자본가들에게 12억 달러나 되는 타격을 입힐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이 파업이 세계적 파장을 일으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둔화

이런 [자본의 국제적 통합이라는] 의미의 세계화는 2008년 경제 위기로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무역은 2008년에 정점에 이른 후, 이후 조금 하락했습니다. 국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하

는 경향도 2008년 이래로 늘었습니다.

이런 점은 2008년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도, 팬데믹 기간 국가의 경제 개입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세계화나 신자본주의 정책이 단숨에 사라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가 1930년대~1950년대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기업·국가 간 새롭고 복잡한 관계가 나타나는 새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팬데믹 이전에도 복잡한 세계적 생산망이 서로 다른 나라들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은 이 생산망이 교란됐을 때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보여 주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자고 했을 때, 미국 기업들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변화를 낳는 요인들

현재 진행 중인 복잡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변화를 일으키는 두 가지 요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요인은 제국주의적 긴장의 증대이고, 둘째 요인은 잇따른 경제 위기입니다.

냉전 종식과 함께 제국주의도 끝날 것이라는 예측은 완전히 어리석은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제국주의는 단지 강대국들의 약소국 지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제국주의의 한 중요한 측면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제국주의는 특히,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서로 충돌하는 제국주의 간 경쟁 체제를 뜻합니다.

제국주의는 국가 간 지정학적 경쟁과 기업 간 자본주의적 경쟁을 서로 결합시킵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펼쳐지는 자본주의 경쟁 논리의 일부로서 국가와 기업 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집니다. 국가들은 세계 질서에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더 높이려고 경제적·군사적 충돌을 벌이게 됩니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에 관해 쓰던 시기에는 미국이 경제력·군사력 모두에서 적수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미국 지배계급 중 좀 더 똑똑한 자들은 자신들이 마주할 잠재적 경쟁자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핵 강대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명백히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의 통합을 지지했지만, 동시에 미국이 유럽연합에 대한 지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

이런 상황에 대한 미국 지배계급의 대응 하나는 나토를 동유럽 쪽으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럽과 미국의 지도력을 굳히려는 측면도 있었지만, 미국-유럽 동맹이 러시아와의 충돌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동유럽 지역에서 자기 영향력을 재확립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 미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9·11 공격을 빌미 삼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이는 잠재적 경쟁자들에 맞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컨대 이라크 점령은 중국에 다음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서방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대리전은 2022년에도 제국주의가 시퍼렇게 살아 있음을 보여 줬다

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중동산 석유에 접근하고 싶다면 미국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점령 모두 처참하게 실패해, 미국 제국주의는 오히려 약화됐습니다.

바로 이런 제국주의 간 경쟁 체제가 지금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합니다. 러시아 제국주의의 발현이니까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나토에 더 통합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저 우크라이나인들의 자기 방어 전쟁이라고만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전쟁은 나토가 지원하는 대리전이기도 합니다.

이는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6월 16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10억 달러어치 군사 지원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이탈리아·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지금 키예프(키이우)에 가 있기도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지원은 540억 달러에 이릅니다. 러시아의 1년치 군비 지출의 80퍼센트에 이르는 금액이고, 전쟁 전 우

크라이나 정부의 1년치 예산의 두 배입니다. 나토는 동부 전선에 병력 4만 5000명을 주둔시키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도 제국주의는 시퍼렇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러시아 제국주의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미국의 주된 경쟁자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로, 이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러시아·미국·사우디아라비아가 삼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기껏해야 이탈리아 정도입니다.

미중 갈등

미국에게 훨씬 더 중요한 적수는 중국입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달성하려 하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바이든은 미국 제국주의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겪은 처참한 실패를 만회하고 다가올 중국과의 쟁투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핵 강대국들 간 충돌이라는 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인류가 살아남는다 해도, 21세기를 규정할

갈등은 미중 갈등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여느 제국주의 강대국이 할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국의 경제력을 이용해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현재로서는 중국은 이 군사력을 대개 지역적 규모로 사용하고 있지, 미국을 상대로 전 세계적 충돌을 벌이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긴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은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해 중국 인근 해역을 순찰할 수 있게 하는 [오키퍼(AUKUS)] 협약을 영국·호주와 체결했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일본·인도·호주를 묶는 쿼드도 부활시켰습니다. 이 동맹 역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중 갈등에는 경제적 경쟁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떠오르는 자본주의 강대국이고 미국은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이 세계화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줍니다.

중국은 신흥 자본주의 강대국이 으레 그렇듯 세계적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반면 미국은 과거에는 자유무역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전보다 훨씬 부정적입니다.

미국의 정책 전환에서 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해 중국을 포위하는 자유무역 영역권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TPP를 내팽개치고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개시했습니다.

바이든의 정책은 여러 면에서 오바마보다는 트럼프에 가깝습니다. 예컨대 바이든은 트럼프가 제정한 관세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역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켜 중국을 배제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도에 다시 나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IPEF는 자유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IPEF는 참가국들에게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는데, 그래야 바이든이 미국 내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PEF 참가국 중 많은 국가들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국입니다. 그런데 오히

려 RCEP는 자유무역을 보장하죠.

이런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두 자본주의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습니다.

영국 금융 언론계에서 도는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대미 교역량을 크게 늘리면서도 대중 교역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줄타기는 결코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첫째, 미국·중국 중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는 압력을 계속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본주의 하에서는 성장의 비율이 불균등하고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신냉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미중 간 '신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모로 상황은 이전의 냉전기와 상당히 다릅니다.

옛 소련과 그 동맹국들은 국가자본주의 체제였고, 더 넓은 세계경제와 비교적 분리돼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혼합돼 있고, 세계 체제에 긴밀히 통합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여전히 많은 서방 기업들이 중국의 노동력과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원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자국 경제와 중국 경제를 '디커플링'하기[분리시키기]가 훨씬 어려운 것이고, 미국과 예컨대 프랑스·독일 같은 국가들 사이에 중국에 얼마나 적대적이어야 하는지를 두고 상당한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미·중 양쪽의 경제 구조가 서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의 잔재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받습니다. 예컨대 경제에서 금융 부문의 중요성을 늘리는 것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신용의 구실은 2008년 이래로 중국 경제의 성장을 지탱하는 데에 갈수록 더 중요해졌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국가가 자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데에 훨씬 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일부 요소들과 결별하게 된 것입니다.



사진 출처: 미 해군

지난해 10월 필리핀해에서 훈련 중인 미국·영국·일본 해군.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통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상황은 훨씬 복잡하다

경제 위기와 국가 개입

서방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의 일부 요소들과 결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가 직면했던 일련의 위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들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반감을 많이 사게 됐습니다. 또, 국가가 자본주의를 구출하기 위해 개입해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2008년에 대규모로 개입했던 것이고, 팬데믹 기간에는 그보다 훨씬 대규모로 개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위기, 즉 생계비 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생계비 위기는 팬데믹 대응 조치들을 거둬들이면서 촉발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누적된 수요가 공급망 교란, 구인난, 생산망 교란으로 인한 공급난과 충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위기를 더 첨예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주요 행위자인 에너지 시장과, 우크라이나·러시아가 주요 수출국인 식량 시장이 교란된 것입니다.

이번 위기로 이미 1억 6100만 명이 기아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추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가 급등

뿐만 아니라, 영국 같은 선진국들에서도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배자들은 물가 인상이 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임금-물가 상승의 악순환'에 관해 떠들어댑니다. 이것은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이번 주에 영국에서는, 실질임금이 기록적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것은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올려 수익을 보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에너지 대기업들이지만, 그들뿐 아니라 기업들 일반이 그렇게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보전하려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국가 개입의 한계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이전 위기 때처럼 그저 금리를 낮추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6월 18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사회가 그랬듯, 대개는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가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세계적 경기 침체가 도래해야만 물가가 잡힐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세계적 통합도 국가의 인플레이션 대응 능력에 제약을 가합니다. 많은 경우 물가 인상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또, 금리가 오르면 국가의 재정 지출이 받는 압력도 커집니다. 국가는 지출을 하려면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래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확대는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매우 흡사한 형태의 노동자 공격과 결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영역에서 지출을 줄이고, 그 지출을 자본주의 지원 노력에 돌리고 싶어 합니다.

위기에 맞선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 동안 있었던 일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들을 구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꽤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주장했듯, 국가가 설령 그러기를 원한다 해도 실제 능력에는 한계가 큼니다.

그럼에도 저는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 국가에 요구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가에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국

가에 개혁을 요구하며 투쟁해서 개혁을 따낼 때 힘과 자신감이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계비 위기에 대응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식료품 가격 급등이 2011년 아랍 혁명을 촉발한 요인의 하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료품 가격 급등은 현재 스리랑카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노동자 투쟁을 촉발한 요인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계급투쟁 수위가 훨씬 낮은 영국에서도 다음 주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모 철도 파업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투쟁들로 우리는 노동자들이 위기에 맞서 자신들의 해법을 관철시킬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그저 신자유주의나 세계화만은 아니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진정한 문제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입니다. 그 자본주의·제국주의의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결국 이 체제를 타도하지 않는다면 계속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발제자의 정리

여러 질문과 발언 감사합니다. 몇몇 질문에 최대한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세계화 간의 관계에 관한 질문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는 상품 생산 과정에서 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극심한 착취가 최근 수십년간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중국을 대체할 나라가 없다면, 가격 인하에 기여하는 이 요인(중국 노동자 착취)이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물가가 치솟으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의 세계화 시기를 돌아보면, 세계화가 덜 돼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이해하기 상당히 복잡한 현상입니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빚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인들로는 각국 은행들과 중앙은행들에 의한 화폐 공급, 자본 축적의 속도 등이 있습니다. 세계화는 그런 요인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퍼뜨리는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관념을 거부해야 합니다.

몇 달 전,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임금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고 기업의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에 쓴 글을 온라인에서 읽어 보십시오.

인플레이션에 관해 한 가지 측면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자본주의는 생태 문제에서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 점이 장기적으로 물가 급등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를 하루빨리 무너뜨려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가 인상에 항의하며 임금 인상 파업에 나선 영국 철도 노동자들 자본주의·제국주의가 만들어 낸 불안정성은 생계비 위기로 이어졌다

진영논리

진영논리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대응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진영논리는 계급 투쟁을 지정학적 갈등에 종속시키는 논리입니다.

예컨대, 시리아의 지배자 아사드가 미국을 적대한다는 이유로 시리아 혁명을 반대한 좌파들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좌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을 적대하고 있으므로 [좌파의]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미권 좌파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은 전혀 대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의 좌파 대다수는 나토에 대해 지나치게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직 러시아 제국주의만 비판하는 것이죠.

영국 같은 나라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철저히 재앙적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나토 회원국에 살면서 어떻게 자국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행히, 우리가 속한 정치 경향은 언제나 진영논리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기원인 국제사회주의 경향(IST)의 창시자 토니 클리프는 냉전이 한창일 때 이런 유명한 슬로건을 제시했습니다.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닌 국제사회주의.”

물론 오늘날은 냉전기와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국주의에 대한 이런 관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갈등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바이트 시기 미중 관계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지 할지 물으셨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매우 중요한 노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희토류입니다. 희토류는 여러 첨단기술 제품의 필수 원료입니다. 희토류 가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국내에 희토류 가공 설비를 짓는 호주 기업을 미국 국방부가 지원하고 있죠.

또, 베트남 같은 나라가 중국을 대체할 저가 노동력 공급처로 떠오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폭스콘 같은 기업이 세계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방 기업들이 여기에 큰 매력을 느낀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면을 볼 때, 1990년대만 해도 중국이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어떻게든 편입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미국 지배계급 중 적어도 일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중국의 WTO 가입

에 미국이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제국주의 간 경쟁의 동역학이 다시 뚜렷해지고 있음은 미국 지배계급에게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세계 질서 내에서의 그런 [부차적인] 지위를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중국제조2025’ 같은 사업은 미국 지배계급에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강경해질수록 미국도 덩달아 강경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 경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 이 경쟁은 어떤 면에서 냉전 시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태 위기와, 장기화된 경제 위기와 중첩되면서 세계를 갈수록 혼란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위기와 혼란의 체제’라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 간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동지들의 투쟁이 모두 승리하기를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통역 천경록

온라인 토론회 영상보기

https://youtu.be/wxey3_fpBw4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규제법 논의에 착수하다

최근 낙태 반대 세력들이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반대 단체들과 함께 낙태 규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0년 말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낙태 관련법 개정안을 2개 발의해 놓았다.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미국 텍사스주법과 유사한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6주 이내는 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자각하지 못하는 시기이므로 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법과 다름없다.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는 10주 이내,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임신부 건강이 위험할 때도 20주 이내 낙태만 허용한다.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주수 제한 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그 외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는 10주만 넘어도 금지된다.

두 법안 모두 상담, 숙려기간, 의사 동의서는 필수다. 청소년은 학대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등 허용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런 법 개정을 통해 낙태 허용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낙태죄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여성들의 고통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입법 토론회를 보수 단체들과 함께 열고 있다

여성 건강을 위해 낙태를 제약해야 한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 때때로 이들은 낙태가 여성의 건강을 해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점을 흐리기도 한다. 낙태가 자궁 손상, 난임, 합병증, 정신적 고통 등을 초래하므로 낙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낙태가 여성의 건강을 해친다는 주장은 과장이다. 숙련된 의료인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진행된다면 낙태는 안전하고 합병증도 드물다.

보수적인 산부인과 의사들(대한산부인과 의사사회 · 직선제 대한산부인과 의사사회 등)과 약사들은 여성의 건강을 위해 10주 이내 낙태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주 이후 태아가 커지기 때문에 낙태 시술이 여성에게 해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는 없다. 사실 안전한 낙태보다 출산이 더 위험하기도 하다. 출산 도중 여성이 사망할 수도 있고, 출산 이후에도 많은 합병증과 후유증에 시달린다. 하지만 아무도 출산 금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물론 여성에게 특정 질병이 있거나 중·후기 낙태인 경우에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숙련된 의료진과 효과적인 낙태 수술을 지원해야 할 문제이지 낙태 금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보수적인 의사들과 약사들은 낙태약 판매 방식, 의료 수가 책정 등 자신들의 이해득실에만 골몰할 뿐,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낙태권에는 관심이 없다.

여성의 육체적 ·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낙태 자체가 아니라 낙태 불법화다.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내몰리고 죄인 취급을 받는 등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낙태권 축소가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하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성의 삶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낙태 규제가 아니라 제약 없는 낙태 전면 합법화가 필요하다. 낙태 비용 건강보험 적용, 유급휴가 등을 통해 낙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민주당을 믿기 어렵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대체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낙태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을 피했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기에 국민의힘은 앞으로 낙태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 들 수 있다. 낙태 반대 세력들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권 보장 판결이 파기될 게 거의 분명한 상황에 매우 고무돼 있다.

윤석열은 집권 이후 낙태 정책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지만, 여느 지배계급과 마찬가지로 저출생 현상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윤 획득에 중요한 노동력 재생산을 통제하려고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할 공산이 크다.

무시

의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낙태 반대 세력을 견제할 수 있으리라고 여긴다면 오산이다. 그간 민주당은 낙태

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하라는 요구를 계속 무시해 왔다.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밀어붙인 데서 보듯, 민주당은 의지만 있다면 낙태권을 보장하는 대체 입법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문제는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평범한 여성들에게 중요한 문제에는 열의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냈을 때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민주

당 권인숙 의원이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과 제한 없는 낙태 허용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민주당 내에서 소수의 지지만 얻었을 뿐이다.

우파와 보수파의 낙태 반대 운동에 맞서 낙태권을 성취하려면, 민주당과 의 입법 공조가 아니라 대중 운동 건설에 무게 중심을 뒤탈다. 특히 낙태권 운동이 여성과 남성 노동계급이 함께 하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대중 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주현

운송료 인상, 노동조건 개선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됐지만,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6월 16일 필자가 방문한 청주공장 앞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대체 수송에 항의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사용자 측과 친사용자 언론들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마당에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 지속은 명분 없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 지속은 정당하다.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운송료 30퍼센트 인상, 공회전비 지급, 광고비 지급 등을 사용자 측에 요구해 왔다. 지긋지긋한 멸시와 차별도 개선되기를 바란다.

하이트진로 사용자 측은 화물 노동자 요구에는 관심이 없고, 해고와 손해배상 청구로 파업 노동자들을 더욱 공격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이미 하청 운송사 3곳 가운데 1곳을 계약해지하는 방식으로 노동자 33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여기에 더해 조합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추가로 계약해지를 예고했다고 한다.

전체 파업 조합원에게 개인별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경악스럽게도 청구된 금액이 조합원 1명당 7억 2000만 원가량이나 된다.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청주 공장 앞에서 대체수송에 항의하는 화물 노동자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사용자 측의 경비견 역할에 충실하다.

“공장 정문 맞은편에 폴리스라인을 쳐 놓고 우리가 넘어가면 ‘불법’으로 싸잡아 버립니다.”

“장시간 주차로 차량 배터리, 요소수 등에 무리가 생길 것 같아 공장 주변을 한두 차례 운행하려고 하면, 경찰이 막아섭니다. 대체 차량들은 신호까지 쥐가며 경호하면서 말이죠. 경찰은 사용자 측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박수동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청주지회장은 말했다.

“(언론들은 파업 동력이 줄었다고 하지만) 조합원 이탈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집회도 매일매일 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본조 파업이 끝났다고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싸움인데,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해 주겠어요.”

돌진하는 대체 수송 차량을 막다 발가락이 부러진 조합원까지 치료와 수술을 미루고 파업 현장에 복귀해 투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날 집회에선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들에게 모금한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파업 노동자들은 연대를 크게 반겼다.

하이트진로 외에도 현대아산캐리어 등에서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운송료 인상 등 생활고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사용자 측에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사용자 측과 정부의 탄압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지금, 연대가 절실하다.

안우춘 노동자연대 충청지회 회원

화물연대와의 합의 비틀고 싶어 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 한 합의를 비틀고 싶어 한다.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에 체결된 합의서에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운임제는 유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운송료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다. 노사정이 매년 적정 운임을 정하도록 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3개월마다 유가의 등락을 연동해 정해진 운임을 재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유가가 오르면 운송료가 자동 인상되는 구조다.

그런데 국토부는 합의를 체결한 지 하루도 안 돼 안전운임제를 올해 말은 아니더라도 폐지는 하겠다고 했다. 즉 일몰제를 연장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급기야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제도 변경”을 거론하며 그조차 비틀고 싶어 하는 속셈을 드러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에게만 “편향적”으로 이롭고 “운임 상정의 객관성도 부족”하다며 제도 연장이나 확대를 논하기에 앞서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주들, 운송사들의 “고충”을 반영하겠다고 한다.

결국 기업주들의 의사를 반영해 운임 수준을 낮추거나 자율 권고로 제도를 바꿔 운송료 인상을 억제하고 싶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화주 단체인 무역협회와 전경련은 합의 내용에 반발하며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가가 무섭게 치솟아 리터당 2100원이 넘었는데(일부 주유소는 3000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눈 감고 싶어 한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화물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은 유류세

와 연동돼 있다. 화물 노동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도 고작 50원 내려 실효성이 없다.

반면, 이 와중에 사상 최대 수익을 내며 이윤 잔치를 벌이고 있는 정유사들은 2분기에도 때돈을 벌게 생겼다.

고유가 속 화물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합의가 체결됐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국회 논의도 남아 있다. 화물연대는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설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처우 개선 투쟁

본지 기자들이 단식 투쟁 이주민들을 인터뷰하다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민 6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주 연서명한 편지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본지에 알려 온 13명의 구금 이주민 중 일부다. 편지를 보낸 이후 단식자 6명 중 몇 명은 보호소 측에 항의하며 자해를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보호소 측은 오히려 이들을 징벌 차원에서 독방에 구금했다고 한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고 특히 난민들이 장기 구금되곤 한다.

필자를 포함한 본지 기자 2명과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활동가가 단식자들을 면회하기 위해 6월 20일 화성보호소를 직접 방문했다.

그러나 이들을 면회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면회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만 해도 보호소 측은 기자 일행 3명이 함께 면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런데 접수 과정에서 기자라고 밝히자 1명씩 면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취재 방해라고 항의하자 다시 3명이 함께 면회에 들어갈 수 있게 허용했다.

우리가 면회실 앞에 도착하자 보호소 측은 휴대폰을 두고 면회실에 들어가라고 요구했다. 사전 허가 없이 촬영이나 녹음이 가능한 물건을 휴대하고 보호소에 출입할 수 없다는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을 그 근거로 들었다.

우리는 공익적 목적의 언론 취재를 막을 이유가 없으며 지금이라도 면회실에 휴대폰 반입을 허가하라고 요구했다. 보호소 측은 논의해 보겠다며 1시간



인권침해가 “법과 질서의 확립”? 화성외국인보호소 행정 건물 출입구

넘게 시간만 끌더니, 급기야 면회를 신청한 단식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어 규정상 면회 대상자가 아니라며 면회를 불허했다.

면회를 막으려는 핑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크게 항의하자 보호소장이 직접 취재자들을 면담했다.

보호소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면회를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로코인 한 명은 당일 아침 ‘난동’을 부려 독방에 구금 중이라는 이유로 면회를 불허했다. 기자 일행의 휴대폰 소지도 끝내 허용하지 않았다.

보호소장은 일부 구금자들이 비상식적인 ‘난동’을 부린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태국, 필리핀인들은 국민성이 온순해 2~3일이면 출국하는데, 업무를 하기 힘든 나라 출신자들이 있다’는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어렵게 면회한 구금자들은 저마다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연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을 쏟아 냈다. 소위 ‘난동’은 이로 인한 스

트레스와 다른 방법으로는 항의하기 어려운 구금된 상황 탓에 벌어진 것이다.

징역

면회는 구금자 2명씩 30여 분 동안 이루어졌다. 구금자들은 한국어가 유창한 편이었음에도 철창이 쳐진 투명 플라스틱 너머로 수화기를 통해 대화를 나눠야 해 불편함이 따랐다. 그들이 가져온 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이들은 식사가 형편없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밥, 양파, 당근이 한 끼 식사 전부인 적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보호소 측은 하루 세 끼 식비가 약 5500원이라고 확인해 줬다. 올해 서울의 초등학교 급식 한 끼 단가가 5256원이다. 초등학교생 한 끼 예산으로 성인 세 끼 식사를 만드는 셈이다. 그럼에도 보호소 측은 교도소보다 높은 금액이라며 이를 정당화했다.

또, 보호소 측은 야외 운동 시간이 하루 30분씩 주어진다고 했으나, 면회한 구금자들은 6월 초 보호소에 구금된 후

한 번도 야외 운동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온수가 오전에 2시간만 나오는 것도 불만 사항이었다. 한 방에 많으면 12명이 수용되는데 이들이 돌아가며 씻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호소 측은 이주민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제한된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게 내준다. 그래서 본국의 가족과 통화하려면 국제전화 카드를 구입해 보호소 내 공중전화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돈 없는 사람은 통화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독방 구금도 수시로 이루어지는 듯했다. 그들은 보호소 측이 독방 구금을 통보한 문서를 여러 장 들고 왔다. 독방에 이불도 없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다며 몸에 난 두드러기를 보여 주기도 했다.

면회한 구금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징역을 여기서 사는 것 같아요.”

구금된 이주민들은 이토록 자유를 구속받아야 할 범죄자가 결코 아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땀 흘려 일하거나, 전쟁과 박해를 피해 한 국에 머물고 싶을 뿐이다.

면회한 한 러시아인은 본국에 돌아가면 징집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것을 두려워했다. 종교적 박해를 우려하며 치안이 좋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다.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 보호소 안에서는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경우도 있었다.

보호소 측은 이들 중 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이력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형을 마치고 나온 이들을 다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다.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임준형

▶ 16면 '8일간의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보다' 기사에서 이어짐

이후 과제

이번 파업에 걸린 판돈이 컸던 만큼, 만만찮은 투쟁과 강력한 연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노동자들도 온전한 승리를 얻어 내기가 쉽지않았다.

파업 일주일째인 6월 13일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쇼크’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특히 파업의 효과가 커지

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지도부는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은 듯하다. 투쟁의 판돈이 커질수록 협상을 중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이 타결됐지만, 일주일 넘게 싸워 온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불균등한 듯하다.

현재 안전운임제를 적용 받고 있는 일부 노동자들은 이 합의안이 실제로 적용되면 고유가로 줄어든 소득을 어느 정도 벌충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한 일부 노동자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듯하다. 적잖은 노동자들은 “투쟁을 더 밀어붙여 요구를 따낼 기회였다”며 아쉬워했다.

정부의 약속 이행 여부, 관련법 개정 여부 등에 따라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지금도 유가는 계속 고공 행진 중이다. 물가 폭등으로 인한 생계비 위기는 지속·악화될 공산이 크다. 이에 맞서 임금 인상, 정부의 대책 등을 위한 다른 노동자들의 저항이 확대돼야 한다.

노동자연대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workerssolidarity.org/join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일하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당시증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새 코너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 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1 2 6

세계화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로운 세계화《세계는 평평하다》는 유명한 책 제목에서 드러나는 생각)가 착각일 뿐임을 보여 준다.

세계화 옹호론자들은 세계화와 경제적 상호의존이 확대되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확립되고, 국제 기구들이 감독하는 세계시장의 틀 안에서 “공정 경쟁”이 이뤄지고, 각국의 정치적 자유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우파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30년 전에 《역사의 종언》에서 그렇게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세계화는 전쟁과 위기로 점철됐고, 후쿠야마의 예견은 틀렸음이 입증됐다.

안타깝게도, 일부 좌파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강대국 사이의 군사적·지정학적 경쟁이 거의 사라진 질서라고 보는 듯하다. 다시 말해, 세계화로 인해 제국주의 국가들 간 전쟁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경쟁과 군사적 경쟁은 불가분의 관계다. 지난 5월 브뤼셀 경제포럼에서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은 이렇게 말했다. “원자재·기술·제품에서의 시장 지위를 활용하는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장을 방해하는 것에 우리는 매우 취약해지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러시아의 이런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오크스(미·영·호주 군사 동맹),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PF) 등을 창설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소련 붕괴 후 30여 년 동안 세계화, 특히 서방과 러시아(그리고 중국)의 경제적·지정학적 관계의 변화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살펴볼 때 그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

1990년대 이래 서방과 러시아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늘려 왔다. 1990년 1월 맥도날드가 모스크바에서 개점했다. 1997년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G7(주요 7개국) 회의에 러시아를 초대했다(G8).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하자 서방은 G8에서 러시아를 축출했다. 그럼에도 독일의 전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2017년 러시아 최대 국영 석유 회사 로스네프트의 이사회 의장이 됐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프랑스의 전 총리 프랑수아 피용도 러시아 석유 회사 시부르의 이사다.

이탈리아 최대 석유 회사 Eni는 러시아 가스회사 가스프롬과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프랑스 자동차 업체 르노는 1996년 러시아 자동차 업체인 모스크비치와 합작 생산을 시작했다. 르노는 러시아 최대 자동차 업체 아브토바즈의 최대 주주다.

러시아의 신흥 부호들(올리가르히)도 런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돈 세탁을 하고 자식 교육을 시켰다. 2003년 석유 부호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영국 프로 축구팀 첼시FC를 인수했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영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아브라모비치는 얼마 전에 첼시FC를 매각했다.)

지정학적 관계

서방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관계도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할 때까지는 그럭저럭 협력을 유지했다.

1991년 7월 바르샤바 조약 기구(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군사 동맹체)가 해체됐지만, 나토는 계속 존재했다.

러시아 지배자들은 나토가 옛 소련 공화국들로 동진할까 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러시아는 나토에 협력을 제안했다. 1995년 당시 영국 국방장관 팔컴 리프킨드는 이렇게 말했다. “고르바초프와 열친은 매우 협조적이었고, 서방과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 15면으로 이어짐



나토는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공문구에 불과했다. 1997년 나토-러시아 기본 협정 회의

사진 출처 NATO

▶ 14면에서 이어짐

1997년 5월 27일 파리에서 나토-러시아 기본 협정이 체결됐다. 나토는 러시아의 안보적 이해관계가 위협받는 군사적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009년 나토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해 달라고 러시아에 요청했다. 러시아는 지원 조건으로 나토와의 협력 강화를 요구했다. 2011년 러시아 해군은 나토의 해상 훈련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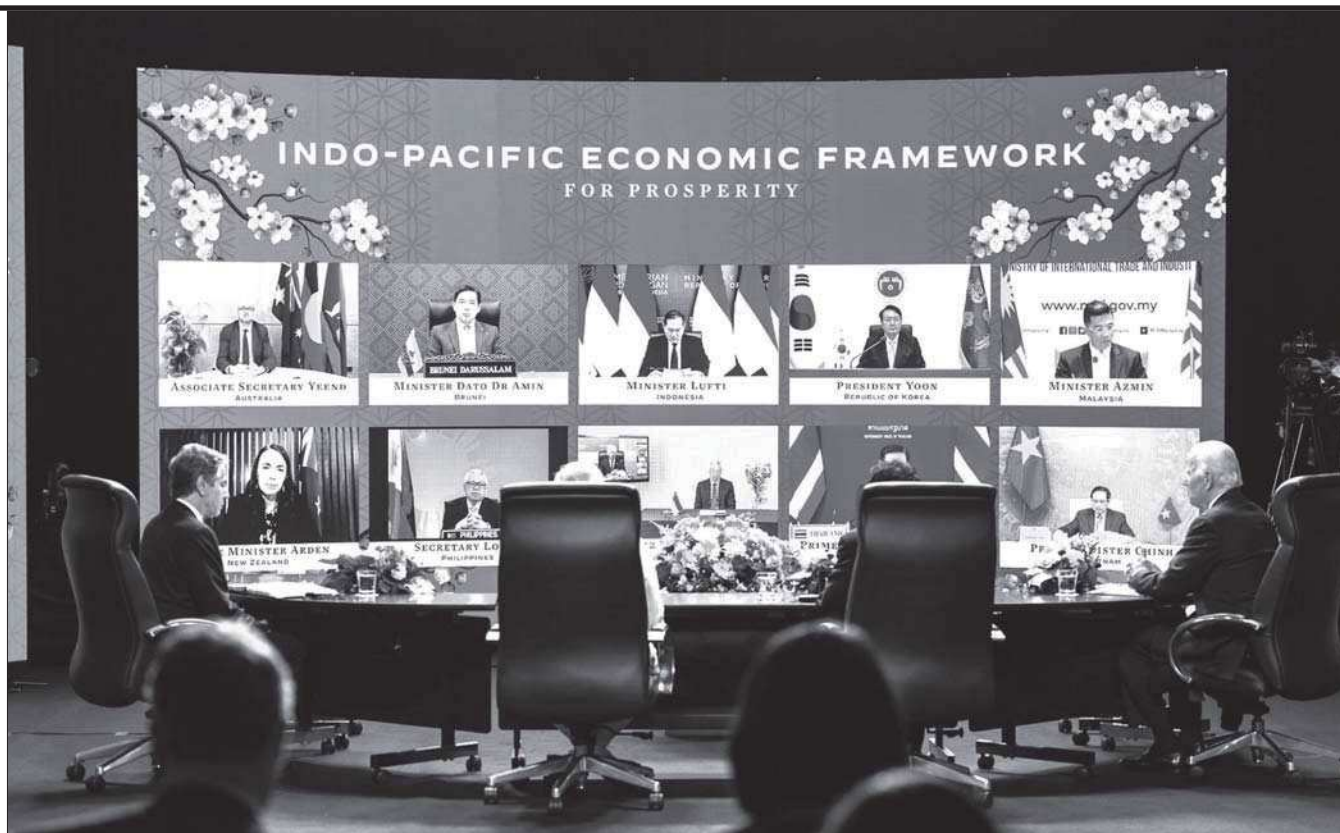
물론 양측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도 긴장은 있었다. 나토가 유고슬라비아 내전에 개입해 1995년과 1999년 세르비아를 폭격하자, 러시아는 나토의 무력 개입에 불만을 나타냈다. 사실, 지금 푸틴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20여년 전 세르비아에 가했던 야만적 행동을 우크라이나에서 재연하고 있다.

또, 1999년부터 폴란드를 필두로 옛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회원국들이 나토에 가입하고, 2007년에 조지 W 부시 정부가 폴란드에 미사일방어시스템(MD)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자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실제 배치는 오바마 정부 때 이뤄졌다.)

2008년 나토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옛 소련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두 국가가 나토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갈 수 있었다. 러시아는 조지아를 공격했고,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의 러시아어 사용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지역을 점령했다. 나토는 감히 개입하지 못했다. 러시아가 냉전에서 패배했어도 세계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들 중 하나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양측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1994~1996년, 1999~2009년 러시아가 체첸을 무자비하게 파괴할 때 서방 지배자들은 이를 용인했다. 특히, 러시아가 2001년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자 미국과 영국은 푸틴의 체첸 공격을 분명하게 지지했다.

2000년 당시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는 푸틴을 “개척가”라고 추켜세웠다. “러시아 지도자는 서방과의 튼튼한 관계를 원했고 개혁의 언어로 말했다. ...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PEF) 회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유럽연합·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수용할 태세가 돼 있고, 강하고 현대적인 러시아 그리고 서방과의 튼튼한 관계를 원한다고 나는 생각한다.”(《가디언》 2000년 4월 17일자.)

이 “새로운 관계”는 신자유주의적 개혁뿐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극에 달하고 있는 학살, 약탈, 파괴 같은 야만적 전쟁 행위도 포함했다.

미·중 경쟁의 격화와 우크라이나의 비극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참화에 휩싸인 것은 우크라이나 밖 국제 상황이 바뀐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을 천명하고 중국 견제를 더욱 분명히 하기 전까지(전임 오바마 정부가 선언한 ‘아시아로의 회귀’ 독트린의 연장선 상에서 중국 견제를 훨씬 노골화했다), 미국의 지정학적 독트린은 대체로 세계화를 추동하는 방향에 맞춰졌다. 맥도날드가 무기업체 맥도널 더글러스 없이는 번창할 수 없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주먹 없이는 작동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강대국들은 세계화의 ‘평화적’ 과정을 위협하는 북한·이란·이라크 등 “불량 국가”를 공동으로 감독하는 데 동의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미국·유럽·중국·러시아가 공존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은 강대국들 간 군사적 대결 가능성의 새 장을 연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가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생산 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라고 촉구한 것은 미·중 간 경제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신호였다.

2008년 경제 위기 때 미국 자본주의는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려 애썼다. 미국은 부국들의 G8뿐 아니라 신흥국가

지 포함한 G20을 불러모아 위기에 대응하고자 했다. 특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핵심 기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어 은행 시스템을 구제할 수 있게 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은 미국이 조율하려 애써 온 국제적 대응이 실패했음을 자인했다는 뜻이다. 2008년에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도 자인한 셈이다.

그 결과 세계 최대 규모 경제들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표면화되고, 그들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군비도 급격히 증강됐다.

그리고 바이든이 얼마 전 방한 때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은 중국이 미국을 기술적으로 추월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었다. 대중 관계 면에서 바이든은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깊숙이 상호 침투하고 있어 두 국가의 경제적 경쟁 양상은 복잡하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중국은 미국 국채(1조 3900억 달러, 약 1770조 원)를 일본에 이어 둘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중 간 경제적 경쟁은 빠르게 군사적 경쟁의 형태를 띠고 있다. 동아시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이 주요 각축장이 되고 있다.

특히, 대만이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이다. 바이든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실시한 미·중 간 대만해협 ‘위게임’(기동훈련)에는 핵무기 맞대응이 포함돼 있다. 미국이 중국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책정한 내년 국방예산 규모는 7730억 달러(922조 원)이다.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대리전이 우크라이나에서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 제국주의의 양대전선(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좀 더 중요한 전선은 중국과의 경쟁이다. 중국도 이 경쟁에 사활을 걸면서 러시아와의 경제적·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왔다. 러시아도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고자 중국에게서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구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앞세워 러시아와 대리전을 치르는 배경이다.

강대국들의 체스 판에 올려져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탄생한 진정한 원인이다. 이 체스 판에서 우크라이나 지배계급은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하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한다. 그럴수록 우크라이나는 서방 의존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중국은 물론 미국·서방도 자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비극은 안중에 없다.

김인식

추천 책

신간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각축전

알렉스 캘리니코프, 로잘리, 김준호, 이원웅 외 지음, 책갈피, 352쪽, 17,000원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각축전

알렉스 캘리니코프, 로잘리, 김준호, 이원웅 외 지음, 책갈피, 352쪽, 17,000원



8일간의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본다

노동자 투쟁이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낼 유일한 수단임을 확실히 보여 주다

박설

화물 노동자들이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전국적인 파업으로 위력을 보여줬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으로 일단 파업이 종료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파업은 여러모로 곱씹어볼 만한 의의가 있다. 국내외적으로 물가 폭등에 따른 생계비 위기가 첨예해진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고통전가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우파 정부하에서 벌어진 첫 대규모 파업이었다는 점 등에서 투쟁은 정치적인 성격도 띠었다.

생계비 위기에 맞선 저항의 포문을 열다

전 세계는 지금 생계비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식료품 가격과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제3세계에서는 혁명으로 발전한 나라들도 있다(스리랑카, 수단 등).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튀니지, 이란, 페루 등 곳곳에서 격렬한 거리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친 듯이 뛰는 물가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름값, 식료품 가격,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올랐다. 정부가 긴급 대책이라도 내놓은 방안들은 '속 빈 강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 폭등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화물 노동자들의 외침은 고물가에 신음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공감을 샀다.

화물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격심한 고통을 겪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가 위축됐다가 회복되면서 공급망 교란 사태가 벌어졌고, 그 속에서 유가가 오르고 요소수 가격이 폭등했다. 올해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사상 최대치로 뛰었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과 무기를 지원하고, 정유사와 기업들의 가격 인상을 방치하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금의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졌다. 정부와 사용자들의 무대책과 비용 전가 속에 화물 노동자들은 매월 200만 원가량 수입이 줄어 생활비가 쪼들리고 빚이 쌓였다. 화물 노동자들이 불만과 투지를 드러내며 투쟁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 파업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것도 그런 압력의 반영이다. 화물 노동자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화물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와 연동돼 있다),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약간의 개선이다.

한국노총 소속의 레미콘 건설 노동자들이 운송료 30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은 이런 개선에 고무받은 사례다. 사업장·부문별로 임금 협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하투(夏鬪)가 더 격렬해질 수 있다는 사용자들의 걱정도 나온다.



김미영 기자

물류를 멈춰 서울 잠재력을 드러내다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한 지 일주일 만에 정부와 사용자들은 일부 산업의 "췌다운 위기"를 걱정해야 했다. 주요 항만, 컨테이너 기지가 마비됐고, 석유 화학단지, 시멘트와 자동차 공장 등이 생산 차질을 빚었다. 정부가 집계한 손실액은 1조 6000억 원에 달했다.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멈춰 이윤에 타격을 가할 힘이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광범한 분노 속에 비조합원들도 대거 파업에 동참했다. 노동자들은 "불법," "폭력" 비난에 굴하지 않고 강단 있게 대체수송(파업 파괴 행위)을 저지하며 싸웠다.

이번 파업의 위력은 특히 화물 노동자들이 하는 일의 성격에서 비롯했다.

육상 화물 운송은 한국 물류산업의 동맥과 같다. 물동량의 90퍼센트 이상이 도로 운송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물류가 멈추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타격이 엄청 크다. 세계적 공급망 교란 사태가 보여 주듯이,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

현대차 등 자동차 기업들의 적시생산 시스템도 취약성을 드러냈다. 재고를 남기지 않고 그때그때 생산하는 구조이다 보니 화물 노동자 파업에 속수무책이었다. 3만 개 가까이 되는 자동차 부품 중 하나라도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생산이 중단되는 것이다.

재등장 우파 정부의 위신을 깎아 내리다

이 투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첫 대규모 파업으로, 향후 "노정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물가 폭등이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투쟁의 성과가 더 많은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쟁에 미칠 영향도 작지 않았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대선에서 간신히 당선했고,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그리 강력하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노동자 투쟁에 "법치의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해 온 만큼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 진압할 것이라는 걱정도 일각에선 나왔다.

파업 초기 윤석열은 "노사 문제일 뿐"이라며 무개입과 무관용 원칙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한 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결국 정부는 직접 교섭에 나서며 타협을 설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세운 말과 달리 처음부터 스텝이 꼬인 셈이다.

이 때문에 재계와 친기업 언론들은 파업 종단을 환영했지만, 예상보다 강경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를 불평하기도 했다. "불법"이 통한다는 선례를 또 남겼다"(<한국경제>)면서 말이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6월 30일(목) 오후 8시 **발제 강동훈** <노동자 연대> 기자

참가신청 bit.ly/0630-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